

공공외교의 현황과 우리의 정책 방향

마영삼 (외교통상부 공공외교 대사)

9.11 사태는 미국 외교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았다. 세계 최강 미국이 압도적 군사력과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외교정책의 실패에 직면하였으며, 이에 대한 반성으로 조셉 나이(Joseph Nye)의 소프트 파워(Soft Power)에 기초한 공공외교(Public Diplomacy)가 재등장 했다. 전통적 외교는 정부 대 정부로 전개되는 외교활동이며, 공공외교는 외국 대중의 마음을 얻어 우리가 원하는 바를 달성하는 외교활동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노르웨이 등 많은 국가가 필요한 조직을 늘리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공공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공외교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다행히 우리의 압축성장과 첨단과학 발전의 경험을 배우겠다는 외국인들의 열의, 빠르게 퍼지고 있는 한류, 스포츠 강국 이미지, 그리고 넓게 확산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공외교 자산이 풍부하다.

우리의 공공외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의하고 협력하면서 나아가되, 민간이 전면에 나섬이 바람직하다. 또한 외국인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정교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과 해외에 있는 730만 동포들과도 협력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다.

또한 학계, 언론계, NGO 등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소통함으로써 공공외교의 추진 전략과 구체적 방안에 대해 아이디어를 교환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외교 정책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 효과, 시정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들 단체들의 피드백이 긴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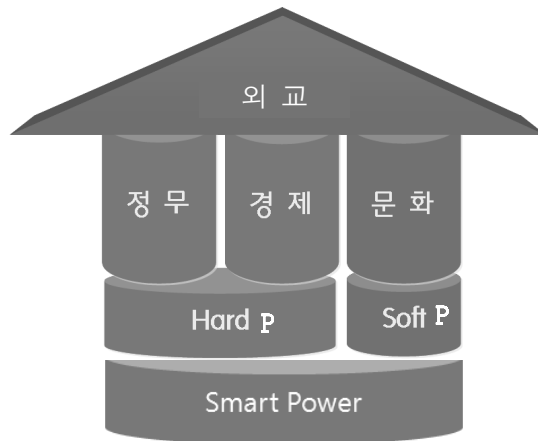
1. 공공외교 일반
 - 가. 공공외교의 재등장
 - 나. 공공외교의 개념
 - 다. 공공외교의 주체 및 대상
 - 라. 각국의 공공외교 추진 현황
2. 우리의 정책 방향
 - 가. 우리나라에서의 공공외교의 부상
 - 나. 우리나라 공공외교 시행 방안
3. 공공외교의 성공요인

1. 공공외교 일반

가. 공공외교의 재등장

1) 경위

- 9.11 사태는 미국 외교정책의 근간을 흔들어 놓았음.
 - 왜 반미주의가 고조되는가?
 - 대규모 군대와 달러를 투입하고서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목표 달성이 어려운 이유는?¹⁾
- 미국은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에 부신했음.
 - 2004년 Joseph Nye 교수는 ‘Soft Power and American Foreign Policy’ 논문(Political Science Quarterly)을 통해 외교방법론으로서 군대와 경제 등 하드 파워를 수단으로 하는 전통외교와 이념·문화·정책 등 Soft Power를 수단으로 하는 공공외교로 분류함.²⁾ 21세기 외교는 하드 파워와 Soft Power와 적절히 결합된 Smart Power에 의해 수행되어야 함을 역설함.³⁾



- 이후 미국정부는 공공외교 개념을 새롭게 채택하였으며, 이로써 공공외교는 미국 신외교의 근간이 되었음. 또한 주요 국가는 미국의 예를 참고하여 자국의 외교정책에 공공외교 요소의 비중을 높여 나가고 있음.
 - 전통외교의 중요성에 비해 공공외교의 가치를 폄하하는 학자들이

있지만, 공공외교는 새 시대의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음.

- 외교는 정무외교 · 경제외교 · 공공외교 3대 축으로 새롭게 형성되어 가고 있음.
 - 정무외교와 경제외교의 상당부분도 공공외교와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이 경우 정무외교 · 경제외교의 목표 달성이 훨씬 용이함.⁴⁾

2) 배경

- 9.11 사태는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해 심각히 반성하는 계기를 가져옴.
 - 미국 군대나 정부가 아니라 미국 전체를 타깃으로 한 대규모 테러가 감행될 만큼 미국은 왜 극악한 증오의 대상이 되었는가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제기됨.⁵⁾
 - 9.11 사태 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매년 수십만 명의 군대를 파견했고, 약 3조 달러를 퍼부어 넣어 미국경제가 휘청거릴 정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건과 지역 안정화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성찰함.
-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외교정책 결정 및 이행과정에서 국민적 의사의 영향력이 확대됨.
 - 외교정책에 대한 자국 국민의 지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외국의 대중에 대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도 필요해져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국민 설명과 홍보에 노력을 기울임.
- 통신수단의 혁명적 발전에 따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소통수단이 획기적으로 변하였으며, 국경을 넘어 대중간의 소통뿐만 아니라 정부와 외국 대중간의 직접 소통이 용이해짐.⁶⁾
 - 온라인을 통한 한국의 매력을 확산시키거나, 자국의 입장이나 정책을 외국 국민에게 직접 설명을 할 수 있게 됨.
 - 정부의 일방적 메시지 전달은 시대착오적임. 따라서 쌍방향 소통과 people-to-people 접촉이 강화됨.⁷⁾
 - SNS에 기초한 쌍방향 소통은 테러단체들의 인터넷 사용기법에 있어 약점을 보임. 즉, 테러단체가 web 1.0 세계에서 일방적 메시지 전달에 의존하고 있을 때 대중들은 web 2.0에 기초한 쌍방향 소통을 희망함. 그러나 ‘경직된 이념(rigid ideology)’에 몰입된 테러단체로서는 web 2.0의 쌍방향 소통에 적절히 응하지 못함.⁸⁾

**외교방법론은
하드 파워를 수단으로
하는 전통외교와 이념·
문화·정책 등 소프트
파워를 수단으로 하는
공공외교로 분류되며,
외교는 정무외교·
경제외교·공공외교
3대 축으로 새롭게
형성되어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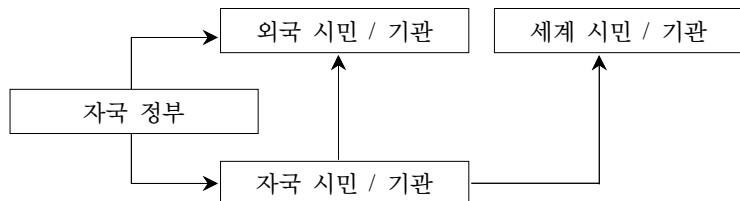
전통적 외교가 일국 정부가 타국 정부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공공외교는 그 접촉대상을 타국 국민으로 삼고 있음. 즉, 일국 정부가 타국 국민들을 직접 접촉하여 자국에 대한 호감과 친근감을 도모함으로써 소기의 외교 목표를 달성하는 것임

- 외교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으로서 공공외교가 재조명됨.

나. 공공외교의 개념

- 최초의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라는 용어는 1965년 Fletcher School 학장인 Edmund Gullion에 의해 사용됨. 당시에 ‘타국의 외교정책의 입안 및 실행과정에 해당 외국 국민들이 관여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일’을 의미하였음.
 - 1997년에 미 국무부 미국 해외공보처(USIA) 병합 기획팀은 ‘공공외교는 타국 대중과의 의사소통과정(understanding, informing and influencing)을 통해 국익을 증진시키는 노력’으로 정의하였음.⁹⁾
 - 전통적 외교가 일국 정부가 타국 정부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공공외교는 그 접촉대상을 타국 국민으로 삼고 있음. 즉, 일국 정부가 타국 국민들을 직접 접촉하여 자국에 대한 호감과 친근감을 도모함으로써 소기의 외교 목표를 달성하는 것임.
 - 이 과정에서 핵심적 요소는 타국 국민의 마음을 사는 것임(To win the hearts and minds of ...).¹⁰⁾
- 공공외교의 업무영역으로는 학자들은 문화외교, 대외홍보, 개발협력 등을 포괄하지만, 개발협력은 업무영역이 광범위하고 별도의 정책 방향을 가지므로 일반적으로 공공외교를 논할 때 문화·홍보를 중심으로 거론함.
 - 문화외교는 공공외교의 핵심(the linchpin of public diplomacy)으로 간주됨.¹¹⁾

다. 공공외교의 주체 및 대상



- 공공외교는 자국 정부가 외국시민과 단체, 기관을 대상으로 함.
 - 기본적으로 타국 대중을 중심으로 하되 NGO, 대학, 언론 등 여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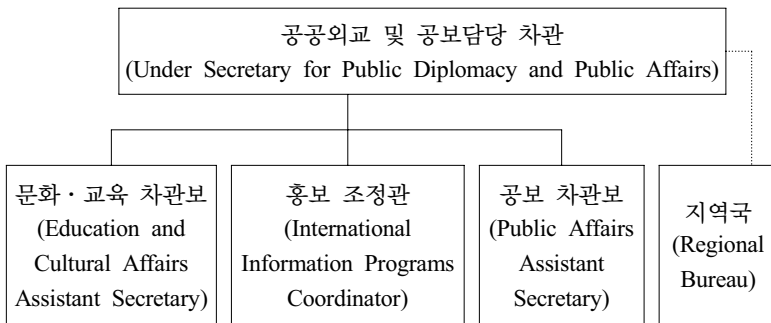
- 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직들을 망라함.¹²⁾
- 최근에는 외교정책에 대한 자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중요해짐에 따라 자국민 및 단체, 기관도 공공외교의 대상으로 되는 경향임.¹³⁾
 - 즉, 자국 시민 / 기관은 국내 외교정책의 지지 기반이며, 공공외교 수행의 동반자로서 공공외교의 주체 및 대상에 포함됨.
- 이제 공공외교의 접촉 대상은 특정 외국 시민이나 기관의 범위를 넘어서서 세계 시민이나 기관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¹⁴⁾
 - 자국 정부가 이들 세계 시민이나 기관을 직접 접촉하기도 하지만, 효과 측면에서 볼 때 자국 시민과 세계 시민 간 그리고 자국 NGO와 국제 NGO 간의 접촉을 통하면 더 용이하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음.

라. 각국의 공공외교 추진 현황

1) 미국

- 9.11 사태를 계기로 전 세계적 반미주의에 대한 대응임.
 - 냉전 시대 동서 이념 대립의 과정에서 큰 역할을 펼쳤던 미국 해외 공보처(USIA)를 1999년 예산 문제로 해체하고 미 국무부에 편입시켜 기능을 축소시킨 것에 대해 크게 반성함.¹⁵⁾
 - 이라크 Abu Ghraib 형무소 수감자 학대 스캔들 사진과 Guantanamo Bay 미국 수용소에서 인권문제 논란이 미국 공공외교의 강화를 촉발시킴.¹⁶⁾
- 국무부에 공공외교 차관직을 신설함.
 - ‘공공외교 및 공보담당 차관’ 직을 신설하고, 그 아래에 3개 차관보(문화·교육 차관보, 홍보 조정관, 공보 차관보)를 두어 공공외교 총괄 조정 체제를 구축함.

문화외교는 공공외교의 핵심(the linchpin of public diplomacy)으로 간주됨. 공공외교는 자국 정부가 외국시민과 단체, 기관을 주 대상으로 함



**중국의 공공외교는
당 중앙에 대외선전
판공실과 국무원의
신문 판공실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전략 수립을
피하고 있음**

- 각 지역 담당부서도 지역별로 공공외교 부 차관보를 두어 본부에서의 지역별 기획과 공공외교 사업을 지원하는 체제를 갖춘.
 - 국무장관이 임명한 American Public Diplomacy Envoy를 파견하고¹⁷⁾ 정부 주요인사가 외국을 공적 방문하는 기회에 직접 대중을 접촉하는 일정을 갖는 등¹⁸⁾ 적극성을 발휘하고 있음.
-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2010년 4개년 외교·개발 검토 보고서(QDDR: Quadrennial Diplomacy and Development Review)를 통해 미국 외교정책의 두 축으로서 Military Power와 Civilian Power를 동격에 놓고, 전 세계적 문제의 해결에 있어 ‘Smart Power’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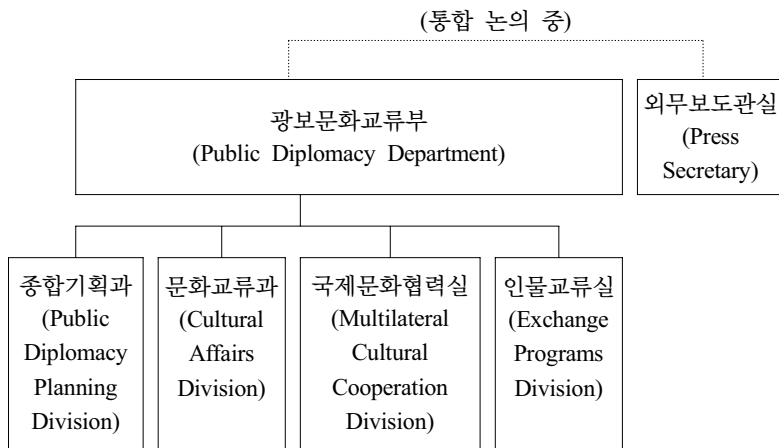
2) 중국

- 경제력 세계 2위 추구 과정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중국 위협론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음.
- 중국은 책임대국론, 평화부상론 등을 발표하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이미지를 만들고 있음. 또한 중국어 보급과 중국문화 공연단 파견 등을 통해 친 중국적 인맥과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는 한편, 대규모 개발원조를 통해 경제적 동반자로서의 지위를 구축하고 있음.²⁰⁾
- 중국의 공공외교는 당 중앙에 대외선전 판공실과 국무원의 신문 판공실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전략 수립을 피하고 있음.
- 이러한 전략으로 각 부처별로 공공외교 정책을 수립 이행 중임. 외교부로서는 대변인실과 정책 홍보실 중심으로 이루어짐.
 - 교육부가 주관하고 있는 공자학원은 2004년에 설립된 이래 점차 확대되어 현재 100여 개국에 340여 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중국어 보급과 문화 보급 사업에 큰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에도 기여하고 있음.²¹⁾

3) 일본

- 경제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면서, 일본 경제력에 버금가는 문화 이미지와 매력적인 이미지를 심기 위한 노력을 강구함.
- 외무성이 공공외교를 총괄 조정하는 가운데 일본 국제교류기금(Japan Foundation)이 구체적 사업 시행하는 구조임.

- 외무성 대신관방(차관보급) 산하에 외무보도관실(대언론담당)과 광보 문화교류부(해외홍보와 문화외교를 결합)를 두고 있으며, 이중 광보 문화교류부가 일본 공공외교·문화외교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함.
- 외무보도관실과 광보문화교류부 통합 논의가 진행 중임. 2012년 중 차관보급 이상 고위직이 관장하는 통합 조직을 설치하는 문제를 검토 중임.



프랑스는 선진국 중 가장 먼저 문화외교에 눈을 떠 이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해왔고, 프랑스어의 보급을 중요한 외교목표로 삼아 '알리앙스 프랑세즈'를 통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영어 만능의 시대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

4) 프랑스

- 프랑스는 선진국 중 가장 먼저 문화외교에 눈을 떠 이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해왔음.
- 프랑스어의 보급을 중요한 외교목표로 삼아 ‘알리앙스 프랑세즈’를 통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영어 만능의 시대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
- 프랑스는 외교부 산하에 있는 협회들을 통합하여 ‘퀼티르 프랑스’를 창설하였으며, 이를 통해 해외문화 보급에 임하고 있음.²²⁾

5) 캐나다

- 캐나다는 강대국이 아닌 한계점을 일찍 파악하고 중진국의 지위에 맞는 선택과 집종의 공공외교를 추진하여 성공을 거두었음.
- ‘대인지뢰 금지 협약’은 미국의 정책에 반하는 것이어서 난항이 예상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인간안보’ 개념을 발전시키고 국제 NGO와 언론 그리고 유사 입장 국가들로부터 협력을 끌어내어 협약

**우리 정부의 공공외교는
큰 틀의 전략과
수행체계 없이 시행되어
온 측면이 있고, 그로
인해 공공외교가 각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어
중복, 불균형 등의
문제점을 노출시킴**

채택에 성공함으로써 ‘평화 및 인도주의’의 이미지를 구축하였음.

- 산성비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법규가 캐나다의 국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민간기업과 NGO 그리고 미 의회를 대상으로 협조를 모색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함. 이로써 ‘환경보호’의 이미지를 굳혔음.²³⁾

6) 노르웨이

- 노벨 평화상 수상자 선정 및 시상을 주관하는 노르웨이는 과거부터 ‘평화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함. 1993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의 오슬로 평화협정 체결을 중재하는 등 평화조성에 크게 기여함.²⁴⁾
-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공공외교도 ‘평화조정자’로서의 이미지를 선정하여 다져오고 있으며, 중앙 집중화된 공공외교체제를 가동시키고 있음.²⁵⁾

7) 이스라엘

-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반유대주의 극복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정부 조직상으로는 가장 적극적 체제를 갖추.
 - 세계 최초의 공공외교 장관직(Minister for Public Diplomacy and Diaspora) 설치함.
- 대 팔레스타인 및 아랍과의 대결구도에서 이스라엘 정부 입장을 홍보함.²⁶⁾
- 미국 내에 있는 유대인 단체도 공공외교에 관한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2. 우리의 정책 방향

가. 우리나라에서의 공공외교의 부상

1) 부상 배경

-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안정 관리, 민주주의 정착과 법치주의, 경제성장과 복지 그리고 PKO 파견 및 개발원조 실시를 통

한 글로벌 코리아(Global Korea) 추구 등 여러 주요 과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음.

-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는 여러 정책이 상호 연계 되어 있어 단편적 정책으로서는 효과가 매우 미미함을 인식하게 됨.
- 이러한 배경에서 공공외교가 적극 추진되고 있으며, 복합외교의 근저에 공공외교가 자리 잡고 있음.

○ 현재까지 우리 정부의 공공외교는 큰 틀의 전략과 수행체계 없이 시행되어 온 측면이 있고, 그로 인해 공공외교가 각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어 중복, 불균형 등의 문제점을 노출시킴.

○ 향후의 우리 외교도 다른 나라와 같이 정무외교 - 경제외교 - 공공외교의 3대 축으로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음.

○ 실제 정무외교와 경제외교는 각각 고유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나, 최근에 들어 정무외교와 경제외교의 일정영역이 공공외교와 중첩이 되고, 또한 공공외교와 연계 추진되는 경우 정무외교와 경제외교의 목표달성이 더욱 용이해진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2) 정무외교와 공공외교 간 협력 영역

○ 우리나라가 공공외교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최대의 걸림돌은 남북분단으로 인한 한반도의 정세 불안정 요인임.

- 아무리 평화롭고 매력적인 한국의 모습을 보이고 한국에 대한 친근감을 심어주도록 노력하더라도,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과 같은 북한의 도발은 일거에 한국의 이미지를 ‘남북대치, 불안’으로 바꾸어 버림.
- 이로 인해 나타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현상을 무역 및 투자의 확대와 관광객 유치에 역점을 두고 있는 우리로서는 시급히 극복해야 할 과제임.

○ 이에 따라 정무외교와 공공외교가 상호 협력해야 할 여지가 많음.

- 우리의 대북정책, 한반도 통일 구상 등 우리의 미래비전에 대해 명확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우선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한반도 정세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나가야 함.
-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정책과 평화통일에 관한 명쾌한 논리를 개발하여 확산 시킬 필요가 있음. 우선, 학계 등과 함께 설득력 있는

**공공외교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최대의
걸림돌은 남북분단으로
인한 한반도의 정세
불안정 요인이기 때문에
정무외교와 공공외교가
상호 협력해야 할
여지가 많음**

**우리나라의 압축 성장을
자신들의 경제발전
모델로 삼으려는 국가가
많으므로 우리의
경제성장 과정을
학술적으로 정리하여
각국에 전달하면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봄**

미래비전을 개발한 후, 우리 국민 및 외국인에게 제시해야 함.

- 국내외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임.
-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한 방편으로서 우리의 긴 역사와 문화 속에서 매력적인 콘텐츠를 찾아 논리를 개발해 나가야 할 것임. 즉, 외국의 지배나 남북분단이 차지하는 기간도 긴 역사 속에서 볼 때는 무시할 만하고, 대부분의 세월 동안 우리는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을 극복하고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노력이 성공을 거두었으며, 우리의 미래도 그러할 것이라는 메시지 전달이 필요함.

3) 경제외교와 공공외교 간 협력 영역

-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에 대해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경이로운 과정으로 높이 평가하는 반면, 일부 국가, 일부 계층에서는 졸부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함.
 - 한국이 경제적으로는 성공을 냈을지 몰라도 문화적·예술적·도덕적으로 선진국의 문턱에 이르는 것은 요원하다는 그러한 부정적 시각을 극복해 나가야 함.
- 우리의 경제 발전은 오랜 역사의 문화적 전통 속에서 간직해 왔던 역량의 발현이며, 근면·희생정신·교육열을 바탕으로 한 인간승리임을 알릴 필요가 있음.
 - 경제발전과 함께 단기간에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질 높은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미래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기초가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야 함.
- 우리나라의 압축 성장을 자신들의 경제발전 모델로 삼으려는 국가가 많으므로 우리의 경제성장 과정을 학술적으로 정리하여 각국에 전달하면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봄.
 -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경험을 각국별 사정에 맞게 맞춤형으로 제시함으로써 진정한 도움이 되게 하고, 더불어 그들의 경제발전 과정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임.
 - 우리의 경제성장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도 공유하여 자신들의 실패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여 진정한 경제협력의 파트너로서의 이미지를 심어 주어야 할 것임.
 - 외국인들은 한국기업의 성장비결에 대해 관심이 많아 우리기업의 경영 모델도 잘 정리하여 전달하는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봄.

나. 우리나라 공공외교 시행 방안²⁷⁾

1) 법제화

- ‘문화외교 활성화 특별법’ 추진
 - 신낙균 의원 등 35명 의원 공동 발의.

2) 외교부 내 공공외교 조직 정비

- 공공외교정책실 신설 검토

3) 구체적 사업(검토안)

- ① Korea 관심 끌기 프로그램
- 외국인 홍보대사/명예대사 임명
 - 국내 연예인, 예술인의 홍보대사 임명을 계속 추진하되, 공관 추천으로 한국 이미지, 정서와 부합되는 외국 인물 선정하고 국제교류재단(KF)과 협조하여 한국 방문 초청 사업 실시함.
 - 우선 5-10개 국가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 실시 후 확대 실시함.
- “I love Korea, because...” 동영상 콘테스트
 -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국에 관한 2~3분 분량의 동영상을 제작하여(휴대폰 활용) YouTube에 게재→ 우리 부에 YouTube 게재 주소 통보로 응모 절차 완료하면 푸짐한 상품도 제공함.
- “Quiz on Korea”
 - 각 공관별로 개최하되 1등 수상자들을 동시에 한국으로 초청함.
 - 최종 결승전을 TV 방송국에서 실시하여 방영을 검토 중임.
 - 주한외국인 대상 Quiz 대회를 개최 검토 중임.
- Korea Corner 설치
 - 해외도서관에 Korea Corner를 설치함.²⁸⁾
 - 도서관에 비해 설치가 용이하고 비용, 접근성, 편리성 면에서 유리함.
 - Digital Library에도 Korea Corner 설치 검토 중임.
 - 외국 교육기관에 한국 정보 제공을 확대함.
 - 외국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 등 교육기관에 한국에 대한 바른

*우리나라는 Korea
관심 끌기 프로그램,
문화상품 수출지원,
개발협력지원 활용 등을
통해 공공외교 사업을
촉진하고자 함*

지식을 확대 제공함.

- 한국무역협회 해외사무소 및 KOICA 사무소에 한국자료코너 설치함.
 - 책, 잡지, DVD, CD 비치 및 대여제도 도입함.
 - 최신 국산 컴퓨터, 3D TV 등 설치함.

② 문화로 한국의 매력을 확산

○ 문화외교 Volunteers

- 문화예술, 연예 기능 보유자들을 문화외교 Volunteers로 임명하면 한류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음.
- 한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국가에 시범적으로 운영.
- KOICA와 협의하여, 우리의 대외원조 사업과 우리 문화홍보 보완적 결합 방안 검토.
- 성과를 보면서 선진국으로 확대 검토.

○ 문화협력 파트너 기업 확대

- 롯데-외교부 MOU 체결('11.9)에 이어, 다른 기업과도 협력 체제 구축 추진.
 - 3D 대형 TV 등 영상관련 장비를 공관에 제공, 공관 행사 시 이용.
 - 주기적으로 장비 및 콘텐츠 업그레이드 필요.

○ 문화상품 수출 지원

- 한국영화 개봉 행사.
 - 주재국에 인기 있는 한국배우, 감독, 스토리의 작품을 선정 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에서 적극적 역할.
 - 개봉 행사를 공관과 영화배급사 공동 개최.
- 한국문학작품 번역
 - 주재국민 정서, 관습, 문화를 감안하여 주재국민에 어필할 수 있는 한국 문학작품 추천, 번역(예: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등).
 - 공관과 현지 출판사 공동으로 작가 초청 사인회 개최, 현지 언론 홍보.

○ 외국인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문화공연 추진

- 현지 정서를 고려한 각색, 주재국민 출연 등 청중이 원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 조정.
- 우리의 유명 예술인/연예인과 매치되는 현지 유명 예술인/연예인과 합동 공연 프로젝트 시행.²⁹⁾

- 공연 후 외국인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능 전수 워크숍 개최.
 - 기타 재외공관에 시행 가능한 다양한 문화행사 아이디어를 본부가 취합하여 재외공관에 툴킷(Tool Kit)으로 제공 추진.
- ③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 한국인 대상 공공외교 추진
 - ‘국민 각자가 외교관’ 캠페인.
 - 해외여행자 및 해외유학생에 대해 외국 방문 시 민간외교관 역할 당부(방송, 신문 또는 인터넷 캠페인).
 - 민간인이 한국을 홍보할 수 있는 내용과 자료 보급(DVD, USB 다운로드 등).
 - 인터넷 토론회, 화상 토론회 개최 검토.
 - 공공외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화(conversation rather than dictation)가 가장 중요.³⁰⁾
 - 국내 NGO - 외국 NGO 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 국내 NGO에 대해 동류의 외국 NGO 연결토록 지원.
 - 현재 국제교류재단(KF)에서 국내 NGO 간 정보교류 웹사이트 구축 중.
- ④ 개발협력을 활용한 공공외교
- KOICA가 건립한 한국학교를 ‘명품학교’로 만들기
 - 해당학교 졸업생을 한국 내 국비유학 및 연수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참여시킴(기존 교과부 국비유학생 사업 또는 KOICA 연수 프로젝트 활용).
 - ⇒ 졸업 후 국내 업체(본사 또는 현지 지사)에 취직 알선.
 - 한국학교에 주기적으로 교육기자재 교체 및 업그레이드
 - KOICA와 협의하여 봉사단원 교사를 동 학교에 파견.
 - 프로젝트의 사후 관리 차원으로 KOICA에서 사업으로 실시해 온 초·중·고등학교 및 직업훈련소 건축.
 - 자연재해 긴급구호단 즉시 파견
 - 긴급구호팀을 재해 발생 즉시 파견함으로써 홍보 효과 극대화.
 - 119 구호대에 설치되어 있는 해외파견 상비팀이 재난 현장에 조기 파견 가능토록 외교교섭 즉시 시행.

**공공외교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종합적 기획
및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임**

3. 공공외교의 성공요인

- 공공외교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 국민의 참여와 지혜를 모아야 함. 공공외교의 효과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정부가 외국 시민과 단체를 직접 상대하기보다는 우리 국민과 단체가 외국 시민과 단체를 접촉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국민 각자가 외교관이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중요하므로, 이와 관련한 대 국민 캠페인 등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 학계, 언론계, NGO, 기업 등과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소통함으로써 공공외교의 추진 전략과 구체적 방안에 대해 아이디어를 교환하여야 할 것임.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외교 정책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 효과, 시정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들 단체들로부터의 피드백이 긴요한 역할을 할 것임.
- 재외공관에서는 현재까지 공공외교의 범위에 드는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여옴. 이 중 the best practices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취합한 후 각 공관에 확산함으로써, 이를 기초로 공관별로 현지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추진토록 해야 할 것임.
- 공공외교 사업이 종합적 기획 없이 부처별로 분산 추진됨으로써 중복, 불균형, 비효율 등 부정적 요소가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종합적 기획 및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임.

상기 보고서상의 '우리나라 공공외교 시행 방안' 부분은 2011.10.28. 한국국제정치 학회가 개최한 학술회의에서 저자가 발표한 내용을 재수록한 것입니다. 이는 동 시행방안에 대해 독자들의 코멘트와 아이디어를 널리 수렴하여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인바, 많은 의견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sm81@gmail.com

기획 및 감수: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편집: 고정선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오은정 (제주평화연구원 인턴)

저자 약력

■ 마영삼

現 공공외교 대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후, 1987년 미국 Georgetown University 외교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음. 주 미대사관, 주 방글라데시 대사관, 주 유엔대표부를 거쳐 외교통상부 아프리카 중동국장을 역임하였으며, 주 팔레스타인 초대 대표, 주 이스라엘 대사로 재직하였음. 저서로는 ‘현대 국제법 (共)’ (2000), ‘21세기 유엔과 한국 (共)’ (2002), 논문으로는 ‘Israel’s Role in the UN during the Korean War’ (2010) 등이 있음.

주석

- 1) Boot, Max, “US Needs PD for Today’s Challenges”, Los Angeles Times, 2006.2.22.
- 2) Nye, Joseph S., “Soft Power and American Foreign Policy”, Political Science Quarterly, 2004, pp.225-257.
- 3) Nye, Joseph S., Ibid., pp.268-270.
- 4) The U.S. Advisory Commission on Public Diplomacy, “Assessing U.S. Public Diplomacy”, 2010, p.10.
- 5) Wikipedia, “Public Diplomacy”.
- 6) Hocking, Brian, “신공공외교 다시보기”, The New Public Diplomacy: Soft Power in International Relations, 번역본, 국제교류재단, 2008, p.75.
- 7) Nye, Joseph S., op.cit., p.270.
- 8) Glassman, James, “Public Diplomacy 2.0”, www.theimaginationage.net, 2008.12.1.
- 9) Public Diplomacy Association, “About U.S. Public Diplomacy”, About Public Diplomacy Community Blogger.
- 10) The U.S. Advisory Commission on Public Diplomacy, op.cit., p.11.
- 11) U.S. Department of State, “Cultural Diplomacy, The Linchpin of Public Diplomacy”, Report of the Advisory Committee on Cultural Diplomacy, 2005, p.1, p.4.
- 12) The First Quadrennial Diplomacy & Development Review(QDDR), “Leading Through Civilian Power”, 2010, p.3.
- 13) 유현석, “한국의 공공외교 강화를 위한 소프트파워 전략”, 한국의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 한국학술연구원, 2009, p.101.

- 14) Hayden, Craig, “Soft Power and the Open Source: Ethics of Public Diplomacy 2.0”, the CPD blog, 2009.1.7; U.S. Department of State, op.cit., p.10.
- 15) Melissen, Jan, “신공공외교: 이론과 실제”, The New Public Diplomacy: Soft Power in International Relations, 번역본, 한국국제교류재단 2008, p.38; Boot, Max, op.cit; U.S. Department of State, op.cit, p.4, p.8.
- 16) U.S. Department of State, Ibid, p.1, p.5.
- 17) Booth, William, “Baseball Diplomacy: Cal Ripken Jr. in Nicaragua”, The Washington Post, November 16, 2008.
- 18) Stephens, Kathleen, “흰눈이 펄펄 오던 날- 미셸 관이 한국에 왔어요!”, U.S Ambassador to Korea Kathleen Stephens’s Blog, 2010.1.15; 정진하, “클린턴 아시아 순방, ‘스타성’ 이용한 스마트외교 빛나”(AP/뉴시스), chosun.com, 2009.2.23.
- 19) QDDR, p.2.
- 20) 이희옥, “중국의 공공외교”, 2011 한국국제교류재단(KF) 총회 세미나 발표문.
- 21) 이희옥, Ibid.; “한국 문화원 등기 거부하는 중국의 속 좁음”(사실), 동아일보 (2011.11.18)
- 22) 조부근, “한국 문화외교의 명암”, 한국의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 한국학술연구원, 2009, pp.81-82.
- 23) 이면우, “일본의 공공외교 추진 체계: 캐나다, 노르웨이와의 비교적 관점에서”, 한국의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 pp.58-59.
- 24) Henrikson, Alan K., “세계 공공적 영역에서의 틈새 외교”, 상기 번역본, pp.146-151.
- 25) 유현석, “호주의 공공외교 추진 체계 개혁” 2011, 한국국제교류재단(KF)총회 세미나 발표문; 이면우, op.cit., pp.61-62.
- 26) 강국진, “국제적 고립 벗고 관계개선 나서겠다”, 올리 에텔스타인 이스라엘 공공외교장관 인터뷰, 서울신문, 2011.10.17.
- 27) 동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2011.10.20 개최된 한국국제정치학회의 학술회의에서 저자가 발표한 내용임. 독자들의 아이디어를 모으는 차원에서 본 보고서에 재게재함. 마영삼, “우리 외교전략으로서의 공공외교”, 한국의 다자외교와 공공외교, 한국국제정치학회, 2011.
- 28) Schneider, Cynthia, “문화의 소통: 미국 외교의 성공사례”, The New Public Diplomacy: Soft Power in International Relations, 번역본, 한국국제교류재단, 2008, p.272; U.S Department of State, op.cit., p.19.
- 29) 조부근, op.cit. p.90.
- 30) Glassman, James, op. cit.

JPI 정책포럼 현황

- 정기웅 『평창 동계올림픽과 한국 스포츠 외교: 방향성의 모색을 위한 제언』 (2011년 9월)
- 김동성 『동아시아 전략적 3국 관계와 한국외교의 대응방향』 (2011년 9월)
- 우준모 『다시 열리는 푸틴의 시대: 러시아 정치 전망』 (2011년 8월)
- 고선규 『일본의 민주당 정치와 한일관계』 (2011년 8월)
- 정지웅 『북한의 변화와 남북통일전망』 (2011년 8월)
- 조태열 『한국의 ODA 정책과 선진-개도국 간 가교 역할』 (2011년 7월)
- 홍현익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극동정책』 (2011년 7월)
- 진행남 『신한류와 동아시아 문화 네트워크』 (2011년 7월)
- 양창석 『독일 통일 교훈과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 (2011년 6월)
- 박동훈 『경제위기 이후 중·미관계 변화와 한반도』 (2011년 6월)
- 임수호 『북·중경협의 현황과 전망』 (2011년 6월)
- 이기현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중동맹의 동학』 (2011년 5월)
- 박상현 『에너지 안보의 동학과 일본 원자사태』 (2011년 5월)
- 김종선 『원자력 사고의 국제 대응체제의 강화 필요성: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2011년 5월)
- 이면우 『대지진 이후의 일본 위상과 동북아질서』 (2011년 4월)
- 김병로 『한반도 통일: 비전과 전략』 (2011년 4월)
- 김동성 『북한 정치경제 체제의 본질과 남북교류협력사업 방향』 (2011년 4월)
- 김종섭 『미중관계의 정상화와 대만』 (2011년 3월)
- 고성준 『새로운 통일 필요성 논리의 개발: 청소년 대상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2011년 3월)
- 이홍섭 『러·중 군사협력의 동향과 장래』 (2011년 3월)

- 김두진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거대기업의 역할: EU사례의 함의와 적용』 (2011년 2월)
- 염돈재 『독일통일의 쟁점과 한반도 통일에의 시사점』 (2011년 2월)
- 정영태 『서해해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방안』 (2011년 2월)
- 김태환 『21세기 신공공외교와 포럼외교』 (2011년 1월)
- 안찬일 『북한의 다각적 평화공세와 체제전환 가능성』 (2011년 1월)
- 황지환 『남북관계의 국제정치』 (2011년 1월)
- 성원용 『러시아 극동지역의 전력공급체계와 남-북-러 전력계통 연계』 (2010년 12월)
- 고상두 『동북아 다자협력체 구축조건: 통일독일의 경험이 주는 함의』 (2010년 12월)
- 김갑식 『북한 당대표자회와 김정은 후계체제 전망』 (2010년 12월)
- 박홍영 『전후 일본 ODA 정책의 변화상: 한국에 주는 함의』 (2010년 11월)
- 최희식 『중일 첨각열도 해양영토분쟁: 평화적 관리 방식의 전환기?』 (2010년 11월)



Jeju Forum for Peace & Prosperity

Community Building in East Asia



www.jejuforum.or.kr

제주포럼 기획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제주평화연구원 (697-120)
Tel. 064-735-6532 또는 533 email. jejuforum@jpi.or.kr
homepage. www.jejuforum.or.kr

제주평화연구원은

2011년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해비치 호텔 & 리조트, 제주에서 '제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을 주관하였습니다. 제6회 제주포럼은 '새로운 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New Asia for Peace and Prosperity)' 라는 대주제 아래 평화와 안보, 경제, 경영, 환경, 문화, 여성, 의료, 도시디자인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의제를 가지고 진지한 토론과 의견 교환을 통해 새로운 국제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아시아 지역내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6회 제주포럼은 김황식 국무총리, 아로요 필리핀 전대통령, 자오치청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위원장 등 국내외 고위인사 등이 참석하여 새로운 아시아 지역협력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었고, 64개 세션에 세계 22개국에서 해당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포럼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켰으며 중국 중견기업인 100여명을 포함, 국내외저명인사 1,800여명이 참여함으로써 규모면에서도 가장 큰 회의로서 종합국제포럼으로서 면모를 갖추고 성대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제6회 제주포럼 개최식에서 공식화된 바와 같이 이제 제주포럼은 격년제 개최에서 매년 개최하기로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제주평화연구원은 **제주포럼 기획단을 발족하여 2012년 5월-6월 중 제7회 제주포럼 개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은 앞으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이 명실상부하게 국내 최대의 종합국제포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7회 제주포럼 부터는 포럼의 의제와 목적에 동의하는 국내외 기관과 단체가 세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세션을 대폭 개방할 예정입니다. **제7회 제주포럼에 대해 귀기관과 귀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제주포럼에 대해서는 포럼 공식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포럼 참가문의는 제주포럼 기획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8월
제주평화연구원 제주포럼 기획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572 (697-120)
전화: 064)735-6500 팩스: 064)735-651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 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